

주 6일, 0시부터 8시까지 야간 근무, 원청 교섭으로 바꿀 겁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춘천환경사업지회 박현유 지회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춘천환경사업지회는 춘천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춘천 시민이 내놓는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이 일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회사 16군데에서 용역을 맡아 하고 있다. 여기 소속된 노동자는 200여 명, 이 중 70여 명이 춘천환경사업지회 소속이다.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의 주요 내용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춘천시 조례는 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의 책임 구역, 계약 기간, 수집과 운반 물량뿐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의 규격 및 수량,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방법까지 모두 정해놓고 있다. 업체와 노동자는 이 규칙들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춘천환경사업지회가 춘천시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6월 11일 지회 사무실에서 박현유 지회장을 만났다. 박현유 지회장은 2012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15년 차 노동자다.

강원도 내 지자체 첫 원청 사용자 인정

춘천환경사업지회는 5월 29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춘천시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로서 처음으로 민간위탁 노조의 원청 사용자 인정이다.

“3월 10일 노조법 개정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중 지자체에 처음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한 공공운수노조 경기도 화성시환경지회를 보면서 논의했어. 저희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4월 말 조정을 신청했고, 5월 29일 춘천시의 사용자성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교섭단위 분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당시인 6월 11일까지) 결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아직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지만, 원청인 춘천시의 과업지시서가 노동시간, 차량, 인원, 쓰레기 수거 방법, 임금, 복

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과 관련한 것들이다. 박현유 지회장이 일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춘천에서 4명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숨졌다. 이전에는 언제 누가 어떻게 죽고 얼마나 다쳤는지 기록도 잘 남아 있지 않았다. 말로 전해 내려올 뿐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기억하고, 위험한 현장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 박 지회장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에 5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후면 발판에 매달려 작업 중, 차량이 미끄러져 인도 블록에 부딪히는 바람에 노동자가 튕겨 나가 사망하고, 다음 해에는 작업 중이던 청소차량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분이 형제였어요(돌아가신 분이 동생). 2020년에도 5톤 압축차 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던 중 승용차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재활용 선별하는 춘천환경사업소에서 춘천 시내로 나오던 차량이 고라니 때문에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1톤 재활용차량이 추돌,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 지회장은 현재 야간에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면 훨씬 안전해질 거라 생각한다. 춘천시와 교섭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다.

“사고가 대부분 야간작업과 관련 있습니

다. 야간작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한데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도 낮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불법 발판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불편해도 우리 생명 지켜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과적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데, 주간 작업을 하면 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밤이니까, 감시하는 눈길도 적으니 조금 편하려고 과적하게 되고,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폐기물 쌓다가 떨어져서 다치게 돼요. 주간 전환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과업지시서에 쓰레기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수거, 운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용역업체랑 지회가 교섭해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그러니 춘천시가 교섭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12년간 4명 사망, 법이 보장하는 주간 전환이 시급해

야간노동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 등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높인다. 현재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은 야간에만 주 6일 이루어진다. 야간노동에 장시간노동까지 하니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 수면장애와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산다. 가족생활이나 자기 일상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 야간작업을 하니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지만, 주간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도 없는 특수건강진단은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다.

“특수검진하면 수면장에 설문지 있잖아요. 사실대로 적어냈더니, 검사를 한 번 더 하래요. 2차 검사를 하라고. 그런데 2차 검사까지 하면 뭐하나요? 일은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들 설문지에 괜찮다, 나안 아파, 문제 하나도 없다고 표시해요.” 인터뷰에 함께 한 지회 홍보부장의 얘기다.

환경미화 작업은 야간에 하는 것이 기본값으로 생각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도입되면서 주간 작업이 법상 원칙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야간작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이 있어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강원특별자치도만 보더라도 18개 시군 중에 저희 춘천시와 속초시, 두 군데만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 불편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춘천시 인구는 30만이고 원주시 인구는 36만이에요. 원주가 도시가 더 크고 교통도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주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도 못 할 게 없다는 거죠.

소각, 재활용 선별, 매립하는 춘천환경사업소 소재지 주민들이 낮에 대형 화물차 오가는 것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긴 한데요,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죠. 그걸 안 하고 노동자가 위험을 떠안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춘천시의 2인 1조 근무 역시 ‘법이 규정하는 대로’ 3인 1조로 변경하는 것, 저상차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지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교섭 과제다.

“폐기물관리법은 주간 근무에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특별한 경우, 골목길 수거에 한해서는 2인 1조 할 수 있다 해 놓고, 춘천시에서는 2인 1조가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걸 상위법을 조례로 피하는 편법이라고 봅니다.

안전 문제로 저상차 도입도 시급합니다. 이미 홍천군에서 2024년부터 저상형 청소차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상 트럭이 되면, 폐기물을 싣는 작업 높이가 낮아지게 되어 추락 시 덜 위험합니다. 게다가 저상차는 운전석과 폐기물 적재함 사이에 탑승 공간이 있고 오르내리기가 쉬워요. 발판에 매달리는 위험한 행동을 안 하게 되지요. 조금이라도 덜 걷고 일할 수 있고요.”

용역업체 대신 진짜 책임 있는 춘천시와 교섭을

그동안 용역업체와의 교섭이나 투쟁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던 시급한 안전보건 과제들을 춘천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 박 지회장의 기대감이 느껴진다. 원청들이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 2026.6.11. 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춘천환경사업지회 김준영 총무부장, 박현유 지회장, 윤요한 홍보부장(왼쪽부터) 사진 : 한노보연

인정하고, 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하지만 박현유 지회장은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용자성을 노동안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면, 그거라도 개선하라고, 노동안전 문제라도 해결하라고 할 것 같아요. 용역업체랑 교섭할 때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용역업체가 ‘자기가 해줄 수 없다’라며 늘 발뺌하던 것들을 이제 춘천시랑 직접 얘기할 수 있으니, 조금은 수월해질 걸로 기대합니다.”

5월 29일 지노위 결정에 대해,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8일 진행했고, 그날 오후 춘천시가 교섭 공고를 냈다. 다른 노동조합들과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부의 안전가이드라인, 원가

산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노정협의로 시작되었다.

“기후부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과 관련해 노정협의를 구성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 1조, 주간근무 등의 원칙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아예 없애는 걸, 이 정부 임기 내에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춘천환경사업지회의 원청 교섭 투쟁은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똑같은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정해지지만, 춘천시와 달리 부평구에서는 지노위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시간과 방식, 사용하는 장비를 모두 결정하고, 임금과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가 교섭책임이 없다면 노란봉투법은 대체 어디서 적용될까? 춘천환경사업지회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인터**